

# ISSUE PAPER

2026. 03. 31. (Thu)

## Vol. 1



MAIN ISSUE

## 왜 지금 극우를 연구해야 하는가

최 종 렬 연구책임자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하였음

### 글로벌 극우 동향 및 이슈 분석

- 극단적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도전 「계급 배신과 인정 투쟁의 정치사회학」
- 일본의 극우 연구 동향
- 동남아시아 극우 정치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 열린 이민다문화포럼 (제 23, 24회)
- 콜로키움(제 1회)

### 연구단 활동 및 성과

- 2025년 제 1회 공동학술대회

### 연구단 2026년 상반기일정

- 열린 이민다문화포럼
- 콜로키움
- 이민다문화센터-한국문화 사회학회 공동 학술대회

# ISSUE PAPER

**Keimyung Center for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다문화주의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지향으로 칭송받아 왔다.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연방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선언한 최초의 나라였다. 2년 후 1973년에 호주도 다문화주의를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다문화주의를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근래 들어 대부분 유럽 국가가 다문화주의 개념을 거의 포기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난 후 몇몇 저명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주의는 갈수록 더 이념적, 정치적 개념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분에서 극우 세력이 부활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앵글로색슨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서구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다. 특히 2015년 소위 유럽 난민 위기를 비롯한 북유럽 지역으로 인도주의적 이민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현상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반이민 및 반다문화주의 이념 확산은 극우 엘리트의 정치적 혐오 수사를 통해 주류화되었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 과정에서 이민, 성 소수자, 세계화의 경제적 결과 등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극우주의가 현실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사회 구성원 자격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정책, 즉 이민 및 시민권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가 수행하는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의 주제는 “극우와 다문화주의”다. 이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극우 정치가 역설적으로 다문화주의 담론을 활용하여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극우 세력은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반대한다. 다문화주의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대는 특정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문화의 유입을 거부하는 토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극우 세력은 다문화주의 담론을 사용하여 ‘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주창한다.

그동안 학자들은 극우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이유를 연구해왔다. 극우 세력의 발흥과 융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경제 이념인 신자유주의를 지구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극우가

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주의 증가, 대규모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불평등 증가가 그런 조건의 예다. 신자유주의는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로 일련의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했다. 특히 잉여 인구 창출, 세계적 불평등 심화,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통해 경제적 불안정과 문화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치보다 시장을 중시하고, 재분배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고, 사회적 권리를 축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의 부상에 일조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건이론을 수용하여 극우와 다문화주의를 연구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40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프로젝트의 위기 지점이자 극우의 발흥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시킨 지점이라는 주장은 엄격한 학문적 탐구를 요청한다. 유럽 학계의 경우 극우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다만 둘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조망하는 일반화된 분석틀이 부재하다. 한국 학계도 극우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극우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극우,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신자유주의, 극우,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독자적인 분석틀을 구성한다. 핵심은 신자유주의적 조건이론과 문화 화용론을 결합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조건이론은 한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극우가 발흥하고 융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를 정의하는 이론적 진영마다 다른 색채를 드러낸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 연구는 극우가 발흥하고 융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정치영역이나 경제영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사회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회를 여러 자율적인 영역으로 분석적으로 나눈다. 각 영역은 그 안에 실현되어야 할 ‘선한 삶’의 가치를 안내할 사회적 포용 규범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이러한 사회적 포용 규범을 뒤엎고 있다는 점이다. 이 틈을 타 극우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적 실천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각 영역에서 극우가 반자유주의적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화 화용론적으로 탐구한다.

국내외적으로 극단적 포퓰리즘이 부상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폭력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등을 이유로 포스트 파시즘의 도래에 대한 우려마저 있지만, 성급한 진단과 낙인은 민주주의의 방어와 공고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극단적 포퓰리즘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기생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사례는 이를 성찰할 수 있는 유익한 사례이다.

## 2025년 독일 총선과 '민주적 합의'의 균열

2025년 2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선거 결과는 전후 독일 정치사를 지탱해 온 '민주적 합의'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기민/기사연합(CDU/CSU)에 이어 제2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득표율 20%의 벽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항의 투표(Protest Vote)'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는 나치 과거 청산을 통해 극우의 발호를 억제해 왔던 소위 '독일 예외주의(German Exceptionalism)'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6년 현재 확인되고 있는 지방선거의 양상이다. 튀링겐과 작센 등 구 동독 지역에서 AfD는 이미 제1당으로서 지역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며, 세칭 '방화벽(Brandmauer)'이라 불리던 기성 정당들의 AfD와의 연정 거부 전략은 기초자치체 단위에서부터 실질적인 통치 불능 상태에 직면하며 무력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AfD의 약진을 단순한 인종주의의 발흥으로 치부하는 규범적, 도덕적 접근을 넘어,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동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사회학적 맥락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경제적 요인: 노동계급의 우경화와 복지 국수주의

AfD의 급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통적 좌파 지지층이었던 노동계급의 우경화다. 창당 초기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경제학 교수들의 정당이었던 AfD는 2015년 난민 위기를 기점으로 '분노한 시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정치경제학자 필립 마노(Philipp Manow)가 지적했듯, 이는 독일의 독특한 경제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인 독일은 자유무역(상품과 노동력)이 필수적이지만, 그로 인한 낙수 효과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추동한 하르츠 개혁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저숙련 노동자와 하층 중산층은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다.

이들은 '개방된 경제'와 '폐쇄적 복지국가' 사이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든 AfD의 논리에 포섭되었다. 즉, AfD는 이민자를 노동시장의 경쟁자이자 한정된 복지 자원을 잠식하는 '무임승차자'로 규정함으로써, 노동계급의 경제적 불안을 '복지 국수주의(Welfare Chauvinism)'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2025년 총선 결과는 이러한 '계급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SPD)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조합원의 약 27%가 AfD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민당 지지율을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일부 산업 직군에서는 추월한 수치다. 특히 구서독의 루르 공업지대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대거 AfD 지지로 돌아선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내연기관 산업의 위축은 노동자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으나, '신호등 연정'(사민-녹색-자민)은 이들의 '생존 불안'을 '기후 정의'라는 당위론으로 덮으려 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적 대리인으로 역설적이게도 극우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 사회문화적 요인: 인정투쟁과 통제 상실의 공포

경제적 요인이 필요조건이라면, 문화적 요인은 충분조건이다. AfD 지지의 핵심 기반인 구 동독 지역의 정서는 '2등 시민'이라는 박탈감에 뿌리를 둔 '인정 투쟁'의 성격을 띤다. 통일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독 대비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서독 출신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 구조는 동독 주민들에게 '식민화'의 기억을 소환한다. AfD는 이러한 박탈감을 '1989년의 혁명을 완수하자'는 반체제 구호로 연결하며, 자신들을 베를린 기득권(즉, 기존의 엘리트 정당)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포지셔닝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주변부의 반란'이 구서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선거에서 확인된 구서독 중산층의 AfD 지지는 '통제 상실'(Kontrollverlust)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 난민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국가가 더 이상 국경과 경제,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졌다. AfD는 '정상성의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젠더 이슈나 다문화주의와 같은 탈몰질적 가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보수적 시민들의 문화적 불안을 효과적으로 자극했다. 결국 AfD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가 결합된 '복합 위기의 정치적 표현'인 셈이다.

## 독일 정치권의 한계와 성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일 정치권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지난 몇 년간 독일 정치권이 고수해 온 '방화벽' 전략과 도덕적 낙인찍기는 한계에 봉착했다. 2026년 초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해산 시도가 법적 난관에 부딪히며, 오히려 AfD에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라는 서사를 제공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은 이를 방증한다. 극우를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그들에게 투표한 20% 이상의 유권자를 되돌릴 수 없다. 독일 정치에서 AfD의 부상은 독일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동시에 기성 정치가 잃어버린 '연결 고리'가 무엇인지 묻는 경고장이다. 노동계급이 왜 그들의 전통적 깃발을 버리고 극우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법적 제재나 도덕적 설교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한국사회에 던지는 과제

독일과 한국의 민주주의 지형과 정치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포퓰리즘 정당 혹은 운동에 대한 본질적 대처는 크게 다를 수 없다. 우선, 민주진영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재정화해야 한다. 독일의 AfD가 노동계급의 불안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이슈를 선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문제는 한국에서도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었다. 주식시장의 불로소득이 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전환의 피해가 고스란히 특정 노동자 계층에게 전가되고, 이들에게 고용안정과 소득 보전이 약속되지 않는 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언제든 극단적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계급적/계층적 대표성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문화전쟁(젠더, 이주, 세대 갈등)을 사회경제적 의제와 통합하고, 세계화 혹은 산업전환의 잠재적 패배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언어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의 AfD와 같은 극우세력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안드레아스 레크비츠. 2019. 『특이성 사회: 현대의 구조변동』. 새물결.
- Arzheimer, Kai. 2024. "The AfD at Ten: From a Eurosceptic Party to a Nativist Nationalist Force." *German Politics* 33(1): 1-18.
- Butterwegge, Christoph. 2018. *Rechtspopulismus im Neoliberalismus*. Weinheim: Beltz Juventa.
- Der Bundeswahlleiter (Federal Returning Officer). 2025. *Bundestagswahl 2025: Endgültiges Ergebnis nach Wahlkreisen (Final Results by Constituency)*. Wiesbaden.
- Forschungsgruppe Wahlen. 2025. *Wahl in Deutschland: Soziale Gruppen und Wahlverhalten (Election in Germany: Social Groups and Voting Behavior)*. Mannheim.
- Hansen, Michael A. and Jonathan Olsen. 2025. "Blue Collar Backlash: The AfD and the Working Class Vote in the 2025 Bundestag Election." *Electoral Studies* 93: 102-115.
- Hans-Böckler-Stiftung. 2024. *Einstellung von Gewerkschaftsmitgliedern zur AfD (Trade Union Members' Attitudes towards the AfD)*. WSI-Report.
- Lux, Thomas. 2022. "The Working Class and the Radical Right: The Role of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in Germany." *Sociology* 56(6): 1120-1138.
- Mau, Steffen. 2019. *Lützen Klein: Leben in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sgesellschaft*. Berlin: Suhrkamp Verlag.
- Manow, Philip. 2018. *Die Politische Ökonomie des Populismus*. Berlin: Suhrkamp.

전근대 동아시아의 세계체제는 일반적으로 '천하' 개념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질서로 알려져 있다. 이 세계 내에서 주변국들은 중국에 '조공'을 제공하고 '책봉'을 얻어냄으로써 지위와 독자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일본은 이로부터 예외였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다는 이 사실이 일본으로 하여금 천황(天皇)이라 불리는 일본의 (상징적) 지배자를 전세계의 중심에 놓는 독특한 세계상을 창출할 공간을 허용했다.

일본의 미토번. 일본의 실권자였던 도쿠가와 가의 방계 가문이 다스리던 이곳의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17세기부터 '대일본사(大日本史)'를 편찬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지배권력의 정통성을 천황과 연계함으로써 대의명분을 말하는 이들이 천황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 서양과의 조우를 '외환(外患)'으로 여긴 미토의 사무라이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일체성과 서양에 대한 배척을 주장했다. 미토학파라 불린 이들의 사상은 자유주의의 부정, 전체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을 내재한 일본 극우 사상의 모판이 되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선언한 일본이지만, 내우와 외환은 그칠 줄 몰랐다. 바깥에서는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자신들의 몰락을 막고자 했던 전근대의 지배층 사무라이들이 정한론, 즉 조선의 식민지화 같은 모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를 주장한 사무라이들은 현양사(玄洋社)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처음에 시민의 권리를 말했으나 이내 국가를 우선시했고, 김옥균 등을 후원하며 아시아의 해방을 선전했으나 이내 아시아 식민화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서구 제국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발상은 2차 대전까지 계속되었다.

1920년대는 진보의 시기였다. 산업화·도시화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아나키즘, 페미니즘 등의 진보적 사상이 일본 사회를 강타했다. 서구에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의 황제가 차례로 폐위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극우는 진보적 사상에 대항하는 한편, 이들의 발흥을 조장한 자본주의를 제어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인 이가 기타 잇키(北一輝)로, 그는 천황이 군과 함께 계엄을 통해 의회정치를 중단하고 재벌을 해체한 후 직접 통치에 나서 국민과 일체를 이루는 사회를 그렸다. 이는 젊은 장교들에게 영향을 미쳐 1930년대가 되면 의회해산과 천황의 직접통치를 목표로 한 쿠데타가 수차례 실행되기

기에 이른다.

패전 이후 미군정은 일본을 전범국으로 만든 것은 극우에 의해 확산된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이라고 보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했다. 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1955년 자민당 출범 이후 이들은 다시금 기회를 얻었다. 패전 후 부쩍 성장한 진보 세력에 대항하고자 정권이 이들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처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말하면서도 '친미'라는 틀 안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할복이 보여주듯, 1970년을 넘어가면서는 미국이 만들어 준 전후 헌법의 무효화, 천황 중심 국가체제, 미국과의 안보 조약 폐기 등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주도하는 '역사 부정'의 흐름도 전후체제에 대한 거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일본의 극우 연구는 주로 극우 조직의 사상과 실천을 분석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김재수의 『일본 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2008)』, 박훈 외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2008)』, 야스다 고이치의 『일본 우익의 현대사: 극우의 공기가 가득한 일본을 파헤치다(2019)』, 마쓰모토 겐이치의 『일본 우익사 상의 기원과 종언(2009)』과 『기타 잇키(2010)』, 다치바나 다카시의 『천황과 도쿄대(2008)』 등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현상으로서의 '넷우익'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 인터넷공간에 등장하여 2010년을 넘어서며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출한 넷우익은 자유주의의 부정과 전체주의 같은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극단적 민족주의와 강력한 배외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아시아의 식민화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일코리안을 포함한 이주민을 혐오하고, 한국과 중국과의 국교 단절을 말한다. 명시적인 조직과 강령을 갖추어 활동하는 대신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상적 실천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이들의 사상과 조직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들의 동기와 실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저널리스트로서 이들의 행보를 면밀히 추적한 야스다 고이치(2012)의 『거리로 나온 넷우익(2013)』과 야스다·야마모토·나카가와 외 『일본 넷우익의 모순(2015)』, 김효진의 『기호로서의 혐한과 혐중(2011)』, 하종문의 『넷우익을 통해 본 일본 우경화의 정치 동학(2018)』 등이 대표적이다.

## 참고문헌

- 김채수. 2008. 『일본 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효진. 2011. “기호로서의 혐한과 혐중.” 『일본학연구』 33: 31-56.
- 다치바나 다카시. 2008. 『천황과 도쿄대: 현대 일본을 형성한 두 개의 중심축』. 이규원 옮김. 청어람미디어.
- 마쓰모토 겐이치. 2009. 『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요시카와 나기 옮김. 문학과지성사.
- 『기타 잇키: 천황과 대결한 카리스마』. 2010. 정선태·오석철 옮김. 교양인.
- 박훈 외. 2008.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 야스다 고이치. 2013. 『거리로 나온 넷우익』. 김현욱 옮김.
- 후마니타스. 2019. 『일본 우익의 현대사: 극우의 공기가 가득한 일본을 파헤치다』. 이재우 옮김. 오월의봄.
- 야스다 고이치·야마모토 이치로·나카가와 준이치로. 2015. 『일본 넷우익의 모순: 우국이 초래하는 망국의 위험』. 최석완·임명수 옮김. 어문학사.
- 하중문. 2018. “넷우익을 통해 본 일본 우경화의 정치 동학.” 『일본비평』 18: 256-288.

정당, 선거,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이는 서구의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정치적 스펙트럼, 특히 극좌와 극우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극우(far-right)' 또는 '급진우파(radical right)'는 민족주의, 권위주의, 포퓰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적 정치 입장을 취하는 활동가와 정당을 가리킨다(Rydgren, 2018). 이 용어들은 흔히 혼용되며, 일부 학자들은 급진우파와 포퓰리즘을 구분하기 위해 '포퓰리즘 급진우파(populist radical right)'라는 표현을 선호하기도 한다(Mudde, 2016). 극우의 핵심 가치에는 '에스노민족주의적 외국인 혐오와 반기독교 포퓰리즘, 그리고 법과 질서, 가족 가치와 같은 주제에 대한 강조'가 포함된다(Rydgren, 2018: 2). 이는 일반적인 우파 정치와 구별해야 한다. 극우는 대체로 기존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등장하는 반면, 주류 우파 정당은 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공직을 맡는다. 또한 극우와 온건 우파는 경제정책에서 유사한 선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측 모두 작은 정부와 시장 불개입의 자유방임(laissez-faire) 원칙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 수 축소, 공공서비스 외 주화, 감세와 같은 정책을 흔히 주장한다.

동남아시아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엔 신 파시즘(neo-fascism), 반이민 정치, 반지구화 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유럽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사례는 종교적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군주주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짧은 글은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관한 몇몇 실증연구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극우적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미얀마의 경우, 로힝야족(Rohingya)에 대한 시민권 부정은 종교적 극단 민족주의(religious ultranationalism)의 요소를 포함한다. 미얀마는 불교 우위를 내세우는 군부정권의 억압적 통치하에 오랫동안 놓여 왔다(Walton, 2016). 더 나아가 군정의 버마족(Bamar) 중심 민족중심주의는 소수민족 지역과의 내전을 장기화하는 데 일조해왔다. 스완 예 후트트(Swan Ye Htut, 2025)는 미국 내 미얀마 난민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많은 소수민족 출신 난민들이 '버마인(Burmese)'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표지를 거부하는 반면, 지배민족인 버마족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밝혔다.

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접한 최남단 주들의 반란은 에스노민족 주의적 갈등을 보여준다. 빠따니(Pattani), 알라(Yala), 나라티왓(Narathiwat) 주의 무슬림들은 국가 종교가 불교인 태국의 국민 정체성으로의 동화에 저항해왔다(Croissant, 2007).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극남부(deep south)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태국은 오랫동안 빈번한 쿠데타(coups d'état)를 겪으며 전반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해왔다. 우파 성향의 군부 지도자들은 군사 개입을 통해 정치를 재편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의 기득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 '독특한 엘리트 쿠데타 문화(distinctive elite coup culture)'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Farrelly, 2013). 10여 년 전 황색 셔츠(Yellow Shirts)와 적색 셔츠(Red Shirts) 시위운동 간의 충돌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전 총리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과 그의 정당은 황색 셔츠 진영으로부터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편 황색 셔츠 운동 자체도 강한 왕당파적 성격을 띠었다. 이런 점에서 군주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 또는 우파 정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Forsyth, 2010). 따라서 태국 맥락에서는 우파와 극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구성이 민족적으로 다양하지만,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이다. 통합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은 독립 이후 2018년까지 국가를 지배했다(Osman and Gomez, 2020).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우위(Malay supremacy)' 체제는 지배적 무슬림 말레이 인구의 특권을 보호하며, 이러한 특혜는 종교와 민족의 구분선을 따라 제도화되어 왔다(Balasubramaniam, 2007; Barr and Govindasamy, 2010).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는 범죄와 마약 밀매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인해 우파 포퓰리스트 권위주의자로 규정되어 왔다(Labastin, 2018).

이 글은 동남아시아 극우에 관한 선별된 연구를 간략히 검토한 것이다. 이 지역의 극우 현상은 종교, 민족, 군주주의, 엘리트주의, 정당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양상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이 글은 동남아시아 극우에 대한 포괄적 그림을 제시하기보다는 초기 개관에 가깝다.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Balasubramaniam, V. 2007. "A Divided Nation: Malay Political Dominance, Bumiputera Material Advancement and National Identity in Malaysia." *National Identities* 9(1): 35-48.
- Barr, M. D. and A. R. Govindasamy. 2010. "The Islamisation of Malaysia: religious nationalism in the service of ethnonationalism."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4(3): 293-311.
- Croissant, A. 2007. "Muslim Insurgency, Political Violence, and Democracy in Thailand."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9(1): 1-18.
- Farrelly, N. 2013. "Why democracy struggles: Thailand's elite coup cultur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7(3): 281-296.
- Forsyth, T. 2010. "Thailand's Red Shirt Protests: Popular Movement or Dangerous Street Theatre?" *Social Movement Studies* 9(4): 461-467.
- Mudde, C. 2016. "The Study of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Towards a Fourth Wave." C-REX Working Paper Series 1.
- Osman, M. N. M. and E. T. Gomez. 2020. "Breaking Malay - Muslim hegemony - patronage, factionalism and feuds in the 14th Malaysian general election." *The Round Table* 109(2): 116-125.
- Rydgren, J. 2018. "The Radical Right: An Introduction." In Jens Rydgren (ed.). *Oxford Handbook of the Radical Ri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wan Ye Htut. 2025. "'In Burma, We're Not Called Burmese': how nation-building and ethnic conflict at home influences ethnic and national identities abroa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025년 제 1회

# 이민다문화센터 공동학술대회

주 제	평화의 경계 넘기: 북합이주 시대의 도전과 과제
일 시	2025. 12. 19.(금) 10:00~18:00
장 소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서울캠퍼스)
주 최	(사)한국이민학회
공동주최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 외 4개 연구단 및 사업단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는 2025년 9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첫 결실로 2025년 12월 19일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이민학회 후기 학술대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였다. "평화의 경계 넘기: 북합이주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130명이 참석하여 이주·난민, 복지·노동, 평화와 통합 등 북합이주 시대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이민다문화센터가 주관한 세션 3에서는 이주를 정체성·제도·일상적 삶의 재구성과 연결하는 세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박희진(동국대) 발표자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책이 당사자를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삶의 다양성과 당사자 시선을 간과하고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모춘흥(한양대)토론자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책이 당사자를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삶의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발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범주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당사자 시선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예슬(계명대) 발표자는 '가족의 메타-변화'(meta-change)를 분석틀로 사용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족을 '정상가족'의 예외가 아니라 초국적 이동과 관계망으로 구성된 '지구화된 가족'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가족 규범과 그에 기반한 편견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 백승민(가천대)은 미디어 속 엘리트 이주자 이미지와 실제 결혼이주자 현실 사이의 층위를 구분해야 하며, 시민권 범주 문제를 '한민족'에서 '한국인'으로의 개념 전환과 함께 섬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하늘(한양대) 발표자는 탈북 여성이 북한·제 3국·한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조적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생존 전략과 관계 재구성을 통해 '일상적 평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토론자 한미애(계명대)는 '침묵'과 '은폐'가 평화 실천인지 단순한 생존인지의 이론적 경계를 묻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탈북 여성을 '일상적 평화의 실천자'로 규정하는 것이 난민의 고통을 미화하는 이론적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민다문화센터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첫 공동 학술행사로서 북합이주 시대의 다양한 이슈를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 활동과 후속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제 23회 열린 이민다문화포럼

# 극우와 정체성 정치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6:30~18:00
장 소	계명대학교 동영관 241호
인 원	약 65명

우리 센터는 2025년 12월 11일(목), 본 연구팀의 책임자인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종렬 교수가 직접 강연을 맡아 '극우와 정체성 정치(The Far-right and Identity Politics)'를 주제로 제23회 열린 이민다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연구소원을 비롯해 관련 전공자 및 학부생 약 65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강연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계급, 젠더, 지역, 종교 등 다양한 축에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그 구조적 틈새에서 극우 세력이 확장해 온 과정을 분석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극우 세력이 기존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를 전유해 '다수자의 억압받은 정체성'을 내세우는 방식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어 악셀 호네프의 인정이론(사랑·권리·연대)을 토대로 정체성 정치의 본래 목적을 짚어보고, 사적 경험을 공적 이슈로 확장하기 위한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와 '사회학적 상상력' 등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최종렬 교수는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한국문화사회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문화사회학, 사회/문화 이론, 질적 방법론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다문화주의, 정체성 정치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 왔다. 2025년 9월 선정된 한국 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극우와 다문화주의: 다원적 민주주의의 관점'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제 24회 열린 이민다문화포럼

# 극단주의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현황, 원인, 대응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16:30~18:00  
장 소 | 계명대학교 봉경관 352호  
인 원 | 약 80명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

우리 센터는 2026년 3월 19일(목),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를 초청하여 '극단주의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 현황, 원인, 대응 -'을 주제로 제24회 열린 이민다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연은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정치의 부상 현황을 유럽·미국 사례를 통해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극단주의를 이데올로기적·방법적·심리적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극우의 핵심 특성인 반평등성과 배타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맥락에서는 민주화 이후 극우 세력의 역사적 전개와 12·3 친위쿠데타를 극우 파시즘의 관점에서 조명하였으며, 개신교 네트워크·청년 극우 정체성 운동·소셜미디어·한미 극우 네트워크 등 주요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극우 성장의 수요·공급 측면 원인을 진단하고, 민주적 헌정 체제 강화, 정치의 사회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 제고, 민주적 시민교육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며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신진욱 교수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유럽연구센터(ZeDES) 소장과 한독사회과학회 부회장, 한국 사회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불평등, 국가 폭력과 극단주의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대와 계급의 관계, 청년 세대의 사회운동, 한국 시민사회의 생태계 변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제 1회 이민다문화센터 콜로키움

# IRB 안과 밖의 연구윤리 - 청년을 만날 때의 고민

일 시	2026년 3월 4일(수) 14:00~15:30
장 소	계명대학교 동영관 345호
인 원	약 20명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김선기 HK 연구교수

우리 센터는 2026년 3월 4일(수),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김선기 HK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IRB 안과 밖의 연구윤리 -청년을 만날 때의 고민'을 주제로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은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기존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윤리 기준이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현장에서 빚어내는 충돌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짚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만날 때 발생하는 사전 동의의 형식성, 피해 방지와 최소위험의 판단 기준, 기계적 익명화가 도리어 초래할 수 있는 소외 문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다층적인 권력 비대칭 등 실제 현장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관료적이고 명시적인 규제를 넘어, 연구 전 과정에서 관계적이고 상황적으로 접근하는 대안적·맥락적 연구 윤리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논의를 마쳤다.



김선기 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HK 연구교수다. 담론, 정책, 실천, 운동 등 청년학 전반과 지식사회학, 담론 분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의 IRB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도 수행해 왔다. 저서로 『청년팔이 사회』가 있으며, 현재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HK3.0 사업단 '동아시아 청년학: 유동사회와 청년인문학의 구성' 아젠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단**  
**2026년 상반기 일정**

**열린 이민다문화포럼**

일 시	내 용
4월 9일 (목) 13시 30분~	하상응(서강대): "미국 공화당의 극우화? 이민정책을 통해 본 MAGA 세력의 국가 정체성 인식"
4월 9일 (목) 13시 30분~	윤지영(경북대): "극우와 젠더"(가제)

**콜로키움**

일 시	내 용
5월 13일(수) 13시 30분~	이인복(연세대): "생성형 AI와 연구윤리"(가제)

**이민다문화센터-한국문화사회학회 공동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내 용
5월 15일(금) 서강대학교	<AI 시대의 문화 변동과 인간의 재구성>